

2008. 05. 24일 지방직 행정법

문1.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.
- ②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·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.
- ④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이 인정되나,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 3번/ 1.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"...다만,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". 2. 60일이다. 4.재결도 행정행위(확인)으로서 불가쟁력 불가변력의 효력이 발생한다.

문2.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,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령상에서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.
- ② 종전에는 무엇이 '법' 또는 '공익'인가를 기준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였으나 판례는 양자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.
- ③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가능성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.
-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.

정답 4번

문3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,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.
- ②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.
- ④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.

정답 ②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.

문4.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보상이 원칙이나, 천재·지변시의 토지사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이때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.

② 판례에 의하면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.

③ 손실보상에서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하여 직접 수익한 자인데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침해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.

④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상 허용된 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, 그렇지 않은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.

정답 ① - 손실보상은 선급을 원칙으로 하나 토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·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후급의 경우에 이자와 물가변동에 따르는 불이익은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(대판 1991. 12.24, 91누308)

문5.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.

②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.

④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.

정답 ④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,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,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(대판 1992. 4. 24, 91도1609)

문6.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재량준칙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하여 반복되어 시행되더라도 이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른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.

② 행정규칙의 제정을 위해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.

③ 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 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.

④ 상급행정기관이 발한 위법이 의심되는 재량준칙에 불복한 공무원은 정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정답 ③ 법적합성의 원칙을 포함한 공익의 요구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의 법령해석규칙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을 형량하여 위법한 법령해석규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문7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①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과정에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에 대한 계고처분이 사정에 따

라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각기 독립해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②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 공매기일의 공고 및 통지는 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③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.

④ 부관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정답 ② 공매기일의 결정이나 이의 공고 또는 통지는 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
문8.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‘직무행위’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.

② ‘직무행위’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력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공법상 비권력적 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사실행위,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.

③ 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.

④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정답 ④ 옳음 /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국가배상의 여지는 있으나 국회의원의 고의·과실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. ②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, 사실행위, 부작위 모두 직무에 포함된다. ③ 관계법규를 모른다고 하여 고의나 과실을 면할 수는 없다, 다만 법령이 워낙 어렵고 학설이나 판례가 귀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소신껏 학설하나를 취하여 행정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법이 된 경우에는 예외이다.

문9. 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할 판례가 아닌 것은?

①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「도시계획법」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취소청구소송

② 구 「해상운송사업법」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사업 면허허가 처분에 대한 당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

③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

④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처분에 따른 수입감소를 이유로 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

정답 ④

문10.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·검사·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.
- ②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정답 ③ 행정조사법 제5조 규정 / ① 동법 제3조 제2항 제6호 ② 동법 제4조 제3항 ④ 동법 제4조 제6항

문 11.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.
- ② 행정청은 모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청이 긴급을 요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청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정답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” 동법 제4항 다음의 각호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.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.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문12.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.
- ②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·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
- ④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문제와 관련하여 계획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.

정답 ④ 계획준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.

문 13.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'공적인 견해의 표명'으로 인정될 수 있다.
- ③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④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공무원들을 통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은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.

정답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,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,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(대판 1997.9.12. 96누18380)

문 14.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.
- ②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.
- ③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·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.
- ④ 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.

정답 ② 하명위반은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. 단, 제재나 강제의 대상이 된다.

문15.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- ②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.
- ③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과태료 액수를 50% 감액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의 남용이다.
- ④ 구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.

정답 ③

문 16.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.

-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관계법령에서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.
-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도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정답 ① 불가쟁력은 행정청 등의 국가기관과 무관한 것이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다.

문17. 행정청이 행정사무처리준칙을 부령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?

- ① 구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,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- ② 「식품위생법」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53조에서 [별표 15]
- ③ 「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정한 「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」
- ④ 구 「약사법」 제69조 제1항 제3호, 제3항에 근거하여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한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89조 [별표 6]의 ‘행정처분의 기준’

정답 ① 대법원 2006.6.27. 선고 2003두4355 판결 【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】

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(2000. 8. 23.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2000. 1. 28.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,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,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,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.

문18.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단순히 거부당한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 이외에 추가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한정되지만 그 문서 등이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.
- ③ 치과 의사 국가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이어서 시험문제의 공개로 발생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대한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, 위 시험문제지 등의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등

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 ④ 정보공개청구서에는 ‘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’ 등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 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.

정답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,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.(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6425 판결 【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】)

문 19.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독촉은 반드시 문서(독촉장)로 하여야 하며, 원칙적으로 납부기간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.
- ②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압류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.
-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.
- ④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.

정답 ④ 선행조치가 무효이면 후행행위 무효가 된다.

문20.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와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 소송은 종료된다.
- ②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 할 수 있다.
- ③ 취소소송의 선결문제(구체적 규범심사)로서 명령·규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정답 ④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승소측인 피고가 부담한다. /① 행정청이 없어지게 되어도 그 행정청의 업무가 존속되는 국가기관이 피고가 된다. ②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아니라 항고가 된다. ③ 행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